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정치권 한때 '슬링'

새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문재인 인사 검토' 보도

권성동 "당 정체성 전면 부정...검토조차 해선 안 돼"

대통령실이 4·10 총선 참패 후속 인사로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17일 나왔으나 대통령실과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날 여의도 정가에는 이를 두고 한때 슬링이기도 했다.

여당의 경우 일각에서 가능한 아이디어라는 반응이 나왔으나 다수가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권에서는 야당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새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하마평에는 원희룡·정진석 등 여권 인사가 오르내렸는데, 야당의 반대와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갑자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거론된 것이다.

박영선·양정철 외에 김종민 새로 운미래 공동대표도 신설될 정부특임 장관으로 거론됐으나, 3명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천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당원과 지지

자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처럼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도 "현실화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범여권인 개혁신당 인사들도 거들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백락도 없이 사실상의 거국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을 뺀다는 자체가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현 정국 수습하기 위해 두서없는 대안들을 내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아주 얄은 정치적인 수로 이것을 돌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써서 외형상으로는 야권을 갖다가 썼기 때문

에 협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 가지고 사태를 수습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해남안도진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공작을 하고 있다"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 내각 구성을 위해 이 대표와 영수회 답을 하라"며 "거기서 만약에 이런 인사들이 두 지도자들 사이에서 합의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인준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변신한 자들을 국민이 다 낙선 시켰다, 심판했다"며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인사들이 간다고 인준이 되겠느냐. 안 된다.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검찰 수사 의뢰

"허위 견적에 10억대 손실"...금품수수 등 수사중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방탄 유리 시공업체 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호처 간부 A씨와 방탄유리 시공업체인 B사 관계자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 지인이 근무하는 B사는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을 수의계약으로 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사의 허위 견적서 제출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 10억원 대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B사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공사 비용이

부풀려졌는지 여부와 함께 금품수수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대기 발령을 받고 경호처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경호처 관계자는 "A씨를 대기 발령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해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적 특혜가 있는지를 밝혀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두 달 뒤인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했으며, 2023년 3월 17일 실제(현장)감사를 끝낸 뒤 추가 조사와 관련 기관·업체들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뉴시스

전남연구원 '동아시아해역

조정기구 사무국, 여수 적격"

유엔 산하 동아시아해역 정부 간 기구인 동아시아해역조정기구(이하 COBSEA) 사무국을 여수에 유치해 '여수세계박람회 시즌2'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탄소중립시대 해양환경 분야 국제기구의 여수 유치는 섬박람회, COP33 개최에 나선 여수를 해양환경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남연구원은 17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2012년 여수박람회에서 '여수 선언'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표명한 여수시가 COBSEA 사무국 유치가 가장 적격지"라고 주장했다.

COBSEA는 우리나라와 중국, 아세안 7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 지역해 프로그램 중 하나다.

최근 해양환경 보호 분야의 초국가적 협력과 해수면 상승, 해안침식 대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2년마다 열리는 정부간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해양과 연안오염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COBSEA는 2009년 제20회 정부간회의 이후 재정 여건과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 여건 등을 이유로 현 방콕에 있는 사무국을 다른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월 항쟁' 故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치순례 별세

전두환 정권을 무너트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고(故)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치순씨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박종철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박종부 씨, 딸 박은숙 씨, 며느리 서은석 씨 등이 있다. 빈소는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9일 금요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서울시립송화원 후 모란공원이다.

박종철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고인은 1987년부터 막내아들을 앓아 간 군사 정권에 분노하며 사회 활동을 이어갔다"며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라고 전했다.

고인은 전두환 정권을 무너트린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모친이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공안 경찰에게 연행돼 물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국회에서 열린 '한전KDN 지분 매각 반대' 기자회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전KDN 지분 매각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13조 긴급조치 제안"

민생회복지원금 13조 포함해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의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기습이 확 막

고 갑갑해지기 시작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 분 말씀이 '이제 마음의 준비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동 갈등으로 삼고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00원을 돌파했는데 지금 현재 1388원으로 다행히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맞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공공

요금 인상 가능성도 켜졌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될 거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 인상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며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지갑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 불어넣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려면 정부가 적극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선거 때 말씀드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남 의대, 갈등보다 화합으로 힘 모아야"

전남도의원들 "목포대와 순천대 간 과열 유치경쟁 우려"

전남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전남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해 '갈등없는 화합'을 강조했다.

차영수 운영위원장(강진) 등 도의원 10명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의대 신설 대학 추천을 위한 공모 방침을 밝힌 이후 목포대와 순천대 간 과열된 유치경쟁을 넘어 동서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태(나주3), 김주용(강진 비례), 김문수(신안1), 김성일(해남1), 정철(정성1), 김정희(순천3), 김정이(순천8), 이광일(여수1), 한숙경

(순천7)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국립 의대 신설은 30년 만의 기회로, 현 정부 임기 내 신설이 최우선 목표"라며 "그러나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되면 평도 때도 놓치게 되는 만큼 지자체와 정치권, 대학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된 목소리를 내 달라"고 호소한 뒤 "김영록 지사는 공모와 심사, 모든 과정을 의회와 협력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호 기자

조국신당 중심 '범야 교섭단체' 구성 속도

민주연합 시민사회도 합류 기대...단체 20석 요건 채워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

민사회 몫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조국신당 당선인 8명이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이다. 이르면 이달 중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 테이블이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전날 가진 비공개 오찬에서 시민회의 당선인 2명(김윤·서미화)이 공동교섭단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연합 당선인들이 제 정당으로 돌아가면 시민회의 당선인 2명은 무소속으로 남게 된다. 시민회의는 민주당과 통합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교섭단체에서 활동하는 방안

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시민사회 당선인들이 나름 독자성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독자적 교섭단체가 가진 장점이 있으니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와 사회민주당 등 군소정당도 교섭단체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은 분위기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권 집권과 정권 교체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윤계옥, 비대위원장 추대론에 "결단 못 내려"

박영선·양정철 인사 보도에 "사전에 몰라"

윤계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결단을 내리진 않았고 어쨌든 의견을 듣고는 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초선 당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총회에서 조금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느 계당의 입장에서 바람직한지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고, 제 개인

적인 입장을 갖고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한 보도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원칙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쪽죽겠다.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 5·18 3단체 감사 결과 모든 회원에 공개하라"

"'보조금 유용 의혹' 집행부에만 감사 결과 공개는 부당"

국가보훈부가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가 최근 단체 집행부에 비공개 통보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회원들이 감사 결과 전체 공개를 촉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섰다.

17일 3단체 등에 따르면 부상자회 일부 회원이 이날 상경해 세종시 국가보훈부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보훈부가 전날인 16일 늦은 오후

각 단체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으나 감사의 대상인 현 집행부에만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되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다.

앞서 보훈부는 3단체가 공방단체로 전환된 이후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이용 내역과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의 지출 투명성을 확인하는 감사를 지난해 연말에 진행한 바 있다.

특히 해당 감사가 부상자회와 공모자회 내부에서 제기된 특정 회원 A

씨의 보조금 착복·유용 의혹 또한 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과에 따라 관련 전망이 드러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은 A씨가 단체 간부 직책을 맡던 중 당시 국가보훈처가 단체에 교부한 보조금 수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고소·고발을 이어왔다.

공모자회원들도 A씨가 보훈처 보조금 중 공용차량 구입비를 유용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 비위 의혹은 단체 내홍으로 이어졌다. /김도기 기자